

# 부동산 가격 변동과 2000년대의 한국 선거: 지역주의 “이후”의 경제투표에 대한 방법론적 탐색\*

박연호 | 플로리다 대학교

한국 선거에서의 경제투표에 대한 연구는 세 가지의 방법론적 난점들을 안고 있는데, 그것은 지역주의 통제의 문제와 경제적 변수 측정의 문제, 동태적 관점의 부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데이터와 방법론의 도입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선거의 연구영역을 넓히려는 시도이다. 그 해결책의 하나로써 본 연구는 중범위 집합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분석의 한 예로 부동산 가격 변동이 2000년대 한국의 선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표준정당충성도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난 선거들에서 이어지는 장기적 경향을 통제한 후, 부동산 가격의 변동이 선거에 어떤 단기적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 결과 다음의 결론에 다다랐다. 첫째, 자가 소유자들은 비소유자들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정부 여당을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둘째, 비소유자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정부 여당에 대한 처벌로 연결시키는 데에는 소극적이다. 셋째, 이런 패턴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 등의 전국적 선거에서 더 강하게 드러나고 지방선거에는 덜 나타나며, 넷째, 정당 명부에 대한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보다 더 정파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경제적 고려는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한국선거, 경제투표, 지역주의, 중범위 집합데이터, 생태학적 추론, 정당일체감

---

\*본 논문을 읽고 문제제기와 토론을 해준 初土會 학술대회 참석자들, 특히 황수익, 안청시, 송주명 교수님과 강신구 박사, 그리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를 드린다. 부동산 데이터를 모아준 동아일보 박정훈 기자와 데이터 정리작업을 도와준 전성훈 군에게도 또한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오류는 저자의 몫임을 밝혀둔다.

## I. 서 론

한국선거를 지배하는 규정적 요소가 지역주의에 기반한 투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8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 지역주의 투표 패턴이 나타난 이래, 한국의 각급 선거들은 예외 없이 영호남지역에서, 혹은 지역출신들의 압도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정당들이 구성하는 지역적 패권정당체계(regionally dominant party system)를 낳았고, 또 그러한 패권정당들이 다시 지역주의적 투표를 재생산하는 순환구조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1987년 선거를 “정초선거(critical election)”라고 규정지을 수 있으며(V.O. Key 1953), 그 이후 20년간 지속되어온 현재의 정당체계를 지역주의적 정당체계라고 규정지을 수 있겠다(이준한·임경훈 2005).

지역주의 투표에 대한 규범론적 평가를 일단 유보<sup>1)</sup>하고 그것을 한국선거를 가장 잘 서술하는 한 변인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의 중요한 질문은 지역주의 이외, 혹은 이후의 한국의 유권자들을 가장 잘 서술하는 변인들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의의 잉여집합 속에 무엇이 있는가, 즉 지역주의를 통제하고 난 후, 한국유권자들이 고려하는 두 번째, 세 번째 요인들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지역주의 정당체계가 다른 체계로 이행한다면 그 이행의 주요 동력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에도 하나의 실마리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sup>2)</sup>

그런 의미에서 최근 한국선거에 대한 연구들이 지역주의 “이후”에 대해 주목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정진민(1992), 정진민·황아란(1999), 강원택(2003), 최준영(2005) 등은 지역주의를 가로지르는 다른 주요한 변인들로 이념과 세대 등에 주목한다. 한국 민주화 경험의 정치사회화를 강조하면서 “386세대”의 특정한 정치적 정향을 예측하고 정리한 학계의 이 작업들은 우리가 한국의 유권자

---

1) 지역주의에 대한 규범론적 평가, 즉 지역주의와 착종된 정당체계가 유권자들의 선호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 정책적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그것은 이 논문에서 다루는 문제는 아니다.

2) 따라서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이후”라는 의미는 이중적이다. 지역주의를 통제적으로 통제하고 난 이후라는 뜻에서, 그리고 지역주의 정당 체계 극복 이후에 올 체제의 모습을 사고해 본다는 뜻에서 이중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들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에 다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세대와 이념적 정향의 결합이 한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국 선거에서 지속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도 뚜렷한 답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인 듯하다(박찬욱 2009; 강원택 2009).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주요 요인으로서 교육수준이나 여타 사회경제적 계급에 수복하는 연구들도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정영태 1993; 김수진 2001; 정병기 2003). 그러나 이상의 지역주의의 잉여변수들이 과연 실제적으로 한국 유권자들의 선택에 얼마나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왔고, 또 계속해서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는 과정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세대요인이 노무현 후보 개인의 대중적 인기와 맞물리면서만 선거에서 구체적인 영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처럼, 계급투표도 민주노동당의 부침과 함께하는 한시적 현상이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들은 더욱 호흡이 긴 시계열적 분석들, 즉 한국선거사의 맥락에서 연구자들이 경험적으로 접근하기 전에는 대답하기가 난해한 문제들일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선거에 있어서 경제투표에 대한 연구만큼 “지역주의의 벽”에 막힌 분야는 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주의가 지배하는 한국선거에서 그 기저에 희미하게나마 있는 경제투표의 흔적을 과연 경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라는 것이 기존연구들의 제1차적인 주요 목표였다고 할 수 있는데, 엄밀하게 말해서 지역주의와는 독립적인, 동시에 시스템 수준에서의 일관된 형태로 드러나는 경제투표의 패턴을 찾는데 기존연구들의 대다수가 “증거부재(non-finding)”의 상태를 과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류재성 외(2008)의 주장처럼 경험적 증거의 부재가 경제투표의 부재를 반영하는 것 일수도 있고, 또 경제투표가 규범적으로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도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이 당면한 문제들이 모델과 데이터와 관련된 방법론적인 것이라는 입장에서 있고, 이러한 방법론적 난점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투표 현상을 추적한다면 한국선거와 한국유권자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보다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희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에서 경제투표 현상을 부동산 가격의 변동과 관련지어 서술, 규명하려고 한다. 일단 다음 절에서는 기존의 경제투표 현상을 다룬 연구들을 방법론적 딜레마들을 중심으로 재검토해볼 것이다. 3절에서는 한국에서

의 경제투표 현상을 부동산 가격과 관련지은 집계 데이터 모델로 설정해 보고, 4절에서는 그 경험적 결과를 보고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투표 현상 뿐 아니라 전술한 다른 여타 지역주의 “이후”에 대한 연구에도 방법론적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것이 이 글의 또 다른 큰 목표이다.

## II. 경제투표 연구의 방법론적 딜레마들

경제투표에 대한 연구들이 집중하는 초점은 다음의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된다. 우선 경제투표가 실재하는지를 경험적으로 보이는 것, 경제투표가 개인적인 것(pocket-book voting)인지 국가적(sociotropic)인 것인지를 살피는 것, 그리고 그것이 회고적(retrospective)인지 전망적(prospective)인 것인지를 규명하는 것 등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sup>3)</sup> 한국에서 이러한 논의들은 김재한(1993), 박경산(1993), 이현우(1998), 류재성 외(2008), 정한울·권혁용(2009) 등으로 이어지면서 유의미한 성과를 낳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아직까지는 논의가 그 첫 번째 목표인 한국에서의 경제투표의 실재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다음의 몇 가지 주요한 방법론적 딜레마들에 기인한다.

첫째, 지역주의에 대한 적절한 통제의 난점이 그것이다. 만약 지역주의와 경제적 투표가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경제투표에 대한 규명을 위해 경제적 요인들이 지역주의와 완벽하게 독립적인 경로로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는 한국적 맥락에서 용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지역주의를 통제한다는 것은 단순히 영남, 호남, 나아가 여타 지역들을 반영한 이항변수(binary 혹은 dummy variables)들을 선형, 혹은 비선형 회귀분석식에 부가적으로 포함시키는 것 이상으로 복잡한 과정일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한 지역의 유권자들의 경제투표의 수준이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과

---

3)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크레이머(Kramer 1971), 피오리나(Fiorina 1981), 킨더 외(Kinder et al. 1981) 참조.

현격하게 다른 것이라면, 그것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는 모델은 경제변수에 부가적으로 지역 변수들을 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변수와 경제변수의 교호(interactive) 변수를 넣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를 가장 단순한 선형회귀 식으로 표현하자면

$$\begin{aligned} \text{한나라당지지} &= \alpha + \beta_1 \text{경제} + \beta_2 \text{영남} + \beta_3 (\text{경제} \times \text{영남}) + \beta_4 \text{호남} + \\ &\quad \beta_5 (\text{경제} \times \text{호남}) + \dots \\ &= \alpha + \beta_1 \text{경제} + (\beta_2 + \beta_3 \text{경제}) \text{영남} + (\beta_4 + \beta_5 \text{경제}) \text{호남} + \dots \end{aligned}$$

과 같다. 경제변수가 한나라당의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차가 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면, 교호변수들의 계수값들, 즉  $\beta_3$ 와  $\beta_5$ , 혹은 이들의 양적 차이가 사실상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추정치라고 할 수 있다.<sup>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이 예외 없이 이상과 같이 설정된 교호변수들을 고려하지 않는 연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경제변수들이 하나에 그치지 않고, 또 지역변수들의 숫자가 단순한 영호남을 넘어서면서<sup>5)</sup> 모델에 포함되어야 할 변수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공선성(collinearity)의 문제<sup>6)</sup>를 야기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제투표의 흔적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상 논의된 교호변수들의 유의미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의 서베이 데이터 속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웅변한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경제투표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서두에서 밝힌 여타 세대, 이념, 및 사회경제적 변인 등에 대한 연구에도 해당되는 지적이다.

두 번째로 경제적 변수들의 측정(measurement)의 난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기존

4) 물론 경제의 총효과(total effect)는  $\beta_1$ 와 모든 교호변수 항목들의 총합이 될 것이다.

5) 위의 식을 본다면, 왜 영호남 뿐 아니라 수도권, 나아가 도시와 농촌 변수들이 포함되지 않으면 안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경제투표가 영호남보다는 수도권에서, 농촌보다는 도시지역에서 더 일어날 것이라는 가설에 동의할 수 있다면, 이러한 지역변수들과 그들의 경제변수와의 교호변수들이 모델에서 빠질 수 없기 때문이다.

6) 물론 공선성의 문제는 데이터에 포함된 정보가 모델을 추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소표본의 문제(small-N problem)"와도 수학적으로 다르지 않다.

연구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경제적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operationalized definition)는 예외 없이 서베이 응답자들의 후보자나 정당을 매개한 경제와 관련된 평가이다. 그러나 정한울과 권혁용(2009)이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처럼, 이것은 외생성(endogeneity)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경제변인들이 서베이에서 측정하는 내용들은 사실상은 정당에 대한 지지—지역주의와도 무관할 수 없는—를 포함한 “오염된(contaminated)” 변수이고, 따라서 연구자들의 초점인 경제적 변인의 선거에서의 효과가 정당·후보에 대한 충성심의 효과와 혼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현우(1998)는 응답자들이 경제적 위기가 누구의 책임이며 어느 후보(김대중, 이회창)가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라는 문항을 경제적 변수로 사용했으며, 류재성 외(2008)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와 이명박 후보의 경제운영능력에 대한 평가를 회고적 및 전망적 경제변수로 정의하였는데, 이 질문들은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이름과 매개되면서 응답자들이 순수하게 경제적 고려만을 가지고 질문에 응했다고는 믿기 힘들다. 좀 더 직접적인 측정변수들, 즉 응답자들의 직접적인 경제에 대한 평가(가정경제 및 국가경제)도 경제변수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류재성 외 2008; 권혁용 외 2009), 이 변수들에서도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배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다.<sup>7)</sup>

이러한 문제, 즉 명확한 경제적 변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미국 선거 연구 분야에서 주요한 이론적 관심사가 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를테면, 객관적인 경제적 지표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응답자들의 주관적 평가를 물어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논쟁이 그것. 이에 대한 크레이머(Kramer 1983)와 키위트 외(Kiewiet et al. 1984)의 진단은 실제적인 거시경제의 상황이나 응답자들의 실질소득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나은 접근이라는 것이다. 그런 반면, 응답자들의 주관적 평가라는 것이 객관적인 지표들보다 개인들의 투표행위를 설명하는데 더 적실하다는 반론(Markus 1988, 1992)도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객관적인 거시경제상황의 미묘한 움직임들을 항상 인지하고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실질소

7) 이 문제에 대한 권혁용과 정한울의 해결방안(2009, 230-34)은 대단히 흥미로운데, 그것은 응답자들을 각 지역별, 지지정당별로 나누어 그 내부에서 경제변인들에 따른 정당투표가 다른지를 보는 것이다. 이것이 외생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Markus et al. 1979)인지에 대한 논의는 제쳐두고서라도, 이 접근은 위에서 본 소표본의 문제(small-N problem)로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득의 변화보다는 가정경제 상황에 대한 총체적 평가가 더 선거에서 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한국 선거에서 경제적 변인들을 측정하는데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과 아울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변인들이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를 간접적으로 말해준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적 변수들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충성심,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는 지역주의적 균열과 독립적이어야 한다. 또한, 아무리 “객관적”으로 측정된 변수라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인지하기 힘들거나 관심이 없다면 또한 피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에서의 부동산 가격 변동이 하나의 새롭게 정의된 유의미한 경제적 변수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경제투표연구와 관련된 마지막 세 번째 난점은 동적 연구(dynamic analysis)의 불가피성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개별 선거란 것은 과거(history)의 컨텍스트에서, 즉 선거사의 맥락에서 평가되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선거 연구는 어떤 형태로든지 동적 관점을 포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테면, 2007년 선거가 이전의 선거들보다 더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은 암묵적으로 이러한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해당 선거에서 경제적 요인의 효과라는 것은 이전 선거들과의 비교의 관점에서만 그 명확한 정치적 의미를 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선거 연구가 진행되어 온 상황은 일방적으로 서베이 연구에만 집중이 되어온 바, 여러 번의 단속적인 단층(cross-sectional) 데이터의 근원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혀 다른 표집과정과 조사기관들이 수행한 일관적이지 않은 설문문항들에 기반한 자료로써는 시계열적인 비교분석들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는 점이다.<sup>8)</sup> 물론 서베이 연구의 유의미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보완해 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계열적 연구의 장점은 위에서 언급한 첫 번째 난점, 즉 한국 선거에서 지역주의 통제라는 문제를 자연스럽게 극복하게 해 줄 것이라는 부수적인 이점이 있다는 사실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과 도시화 정도를 막론하고 지난 선거를 이용

8) 이런 맥락에서 동아시아 연구소(EAI)의 최근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기간에 동일한 응답자들을 조사한 패널데이터의 수집은 대단히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단층데이터를 시계열적으로 연결하는 연속단층(rolling cross-section)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브레이디 외(Brady and Johnson 2006)를 참조할 것.

한 계량적 통제를 수행한다면, 연구자들을 질곡해왔던 극단적인 지역주의적 분산(variance)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예를 들면, 2007년 선거를 연구함에 있어서 2002년의 정당지지를 통제(혹은 뺀) 후의 정당지지 변동이 과연 (단기) 경제 변수들에 영향을 받는지를 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가능한 새로운 접근의 구체적 양태를 약간은 극단적으로 스케치해본다면, 그것은 정당들의 시계열적 지지도 변화와 이에 미치는 거시경제지표의 변동을 연구한 크레이머(Kramer 1971: 1983)적인 모델을 한국에 원용하는 것이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곳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해야 할 점은 크레이머류(流)의 연구는 거시·집합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라는 것이고, 한 분석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선거, 즉 미국 선거사에서의 공화/민주당의 지지,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지표를 보았다는 점이다. 이 접근은 사실 한국연구자들에게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 그것은 한국정당들의 짧은 수명과 길지 않은 선거사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세 가지 난점들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중범위 집합데이터”를 사용하는 접근을 한국 선거 연구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시도하려고 한다. 이 접근 또한 나름의 어려움—생태학적 추론의 문제들(ecological inference problems)<sup>9)</sup>—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상에서 논의한 경제투표연구, 혹은 한국 선거연구의 근본적 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의미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따라서 한국 선거연구가 천착해왔던 개인 수준의 서베이 연구들을 보완해주는 새로운 데이터 소스로 눈을 돌릴 계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 본격적인 논의는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중범위 집합 데이터”에 대한 서술과 이를 분석하는 모델을 전개하는 것인데, 그 작업은 다음 절에서 논의된다.

### III. 경험적 모델의 전개, 그리고 중범위 집합 데이터

본 절에서는 이상 논의된 한국선거연구의 딜레마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제투표현상 연구를 위한 이론적인 모델의 도출을 시도한다. 우선 지역주의를 어떻게

9) 이에 대한 체계적 논의로는 에이컨 외(Achen and Shively 1995), 킹(King 1997), 및 박(Park 2008) 참조.



통제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표준정당 지지도의 개념을 도출하고, 이어서 경제적 변인, 보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변동이 어떻게 경제투표의 과정으로 개입하는지를 스케치할 것이다. 모델에 대한 논의에 이어, 본 연구에 사용된 중범위 집합 변수들을 하나씩 기술하면서 데이터의 기본 특성에 대한 서술도 수행할 것이다.

## 1. 모델

### 1) 과거(history)의 통제

앞 절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시계열적 구조의 데이터가 한국 선거연구에 가져다 줄 수 있는 크나큰 이점은 무엇보다도 이전의 선거가 주는 정보를 통해 지역주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민주당의 득표율을 직접 설명하는 것 보다는 민주당의 득표율의 증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역주의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Y_{jt}$ 를 어떤 특정정당에 대한  $t$  시점,  $j$  선거구에서의 지지도라고 놓고, 여타의 독립변수들을  $x_j$ 라고 쓴다면,

$$Y_{jt} - Y_{jt-1} = f(x_j, \beta + \varepsilon_{jt}) \quad (1)$$

의 식은 선거에서의 단기적 효과들을 분석하는 경험적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바로 이전의 선거, 즉  $t-1$  시점에서의 선거라는 것은 또한 그 시기의 고유한 유동적인 단기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이를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는 “과거의 선거”라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좀 더 발전시켜, “표준정당충성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즉 (1)식을 변형한 이단계(two-step) 분석 전략을 적는다면,

$$\begin{cases} Y_{jt} = \gamma_0 + \gamma Y_{jt}^* + U_{jt} \\ U_{jt} = f(x_j, \beta + \varepsilon_{jt}) \end{cases} \quad (2)$$

가 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표준정당충성도”로부터 이탈하는 부분만큼의 현재

의 정당지지를 단기적 요인들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표준정당충성도, 즉  $Y_{jt}^*$ 를 어떻게 도출하는가를 이제 논의하도록 하자.

## 2) 표준정당충성도의 도출

현재 선거 결과는 과거 선거들에서 드러난 정당지지도, 즉 장기적일 수밖에 없는 정당에 대한 표준충성도를 기측으로 단기적인 변인들의 부가적이고 유동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위의 논의에 동의한다면, 이러한 과거의 선거들을 하나로 지표화하는 변수의 유용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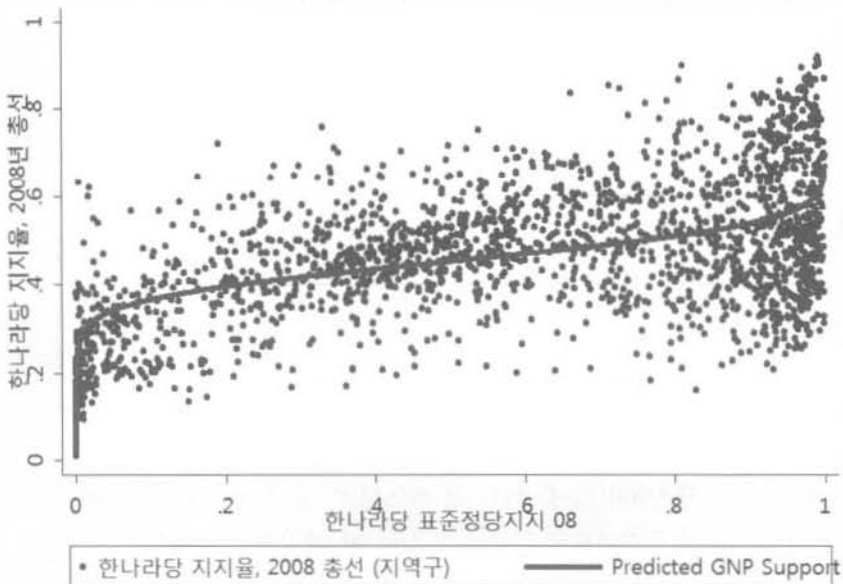
이러한 정당충성도를 직접적으로는 관측되지 않는 개인들의 정당에 대한 비교적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잠재적 지지로 정의한다면, 이것이 각급선거에서 발견되는 것이 바로 투표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것은 일반적인 구조방정식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에서 이야기하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와 발현변수(manifest variable)의 관계와도 동일하다.<sup>10)</sup> 이러한 잠재변수들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도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동일한 사항들을 관측한 여러 개의 변수들을 하나의 가장 주요한—최대분산을 가진—변수로 응축(collapse)할 수 있는데,<sup>11)</sup> 위의 논리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도출된 주성분을 해당선거에서의 “표준정당충성도”라 정의하기로 한다. 즉, 이전 선거들에서 드러난 정당지지율들 속에서 최대분산을 가지는 요소가 바로 표준정당충성도이며, 이 속에는 지역주의적 정당지지<sup>12)</sup>를 포함한 이전 선거들 중의 가장 지속적인 요소를 하나의 변수로

10) 콘버스(Converse 1966)가 주창한 정상투표(normal vote)의 개념도 이와 과히 다르지 않은데, 본 연구에서는 접근은 그것의 집계수준에서의 측정치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11) 보다 자세한 논의는 볼렌(Bollen 1989)과 조리페(Jolliffe 2002) 참조.

12)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주성분분석을 통해 추출된 첫 번째 주성분은 지역주의와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반드시 지역주의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의 맥락에서 엄밀히 말하자면, 그것은 지난 선거들의 단기적 변이값들을 제외한 가장 지속적인(stable)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요약하는 변수이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이, 과거의 선거로 설명되지 않는 현재 선거에서의 단기적 변동, 즉 평소 지지 정당으로부터의 대한 이탈이 얼마나 경제적 고려에 의한 것인가 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상과 같은 정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지역주의 뿐 아니라 다른 여타 안정적인 정당에 대한 지지수준을 모두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림 1〉 한나라당의 18대 총선 지지율과 표준정당지지

포괄한 것이다.

기술적인 문제를 조금 더 언급하자면, 표준정당충성도의 도출을 위해서는 최소한 세 번 이상의 이전 선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해당 선거 이전 네 번의 선거를 이용하여 표준정당지지를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표준정당지지는 2007년 대선, 2006년 광역의회 비례선거와 기초의회 비례선거,<sup>13)</sup> 2004년 총선 등의 네 개의 선거를 가지고 추출하였다.

〈그림 1〉은 이상에서 언급한 한나라당의 2008년 총선에서의 실질적 지지도와 표준정당지지도의 관계를 그래프로 보인 것이다. 각 점들은 전국의 읍면동들이 이상의 두 변수에서 갖는 값들을 표시한 것이고, 중간의 선은 위의 식 (2)의 첫 번째

13) 표준정당지지의 개념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보다는 정당에 대한 지지를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광역·단체장 선거보다는 정당명부에 대한 비례대표선거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식을 표현한 것이다. 각 점들의 회귀 예측곡선<sup>14)</sup>으로까지의 수직적 거리는 각각의 동들이 얼마나 표준정당지지로부터 이탈했는가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2) 두 번째 식의 좌향이 될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자면, 이 논문에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그러한 이탈거리, 즉 해당선거에서의 단기적 변동들이 무엇에 의해서 일어났으며, 보다 주요하게는 어떻게 부동산 가격의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점이다.

### 3) 경제적 변수가 개입하는 방식

유권자들이 투표를 결정함에 있어서 경제적 변인들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는 단기적 요인들을 고려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장기적인 고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지난 5년 임기동안 변동한 집값을 토대로 지지 정당을 고려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지만, 개연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sup>15)</sup> 이 문제는 물론 이곳에 제시되는 모델에 의해서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바, 본문에서 결과를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집값 변동이 장기적 고려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절의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는 선거 직전 6개월 동안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의 개념을 사용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데이터에 대한 서술부분으로 미룬다.

단기적 부동산 가격의 변동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라는 인식의 차원이 그것인데, 그것은 선거에 있어서 거시국가 경제지표가 지니는 특성에 가깝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 논문의 분석차원과는 다른 범위의 질문이 될 수밖에 없다. 즉, 본 논문의 디자인상 국가경제적 투표(sociotropic voting)를 확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14) 세부적인 기술적 언급을 하자면, 그림에서 보이고 있는 회귀예측선이 직선이 아니라 비선형인 이유는, 가로축에  $Y_{j,2008}^*$ 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를 0과 1 사이의 지지율 스케일로 변환했기 때문이다. 주요인분석에서 추출된 요인들은 스케일이 0과 1 사이로 한정되지 않고, 정규분포를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15) "좌파집권 10년을 심판하자"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구호는 이러한 고려의 한 가능성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10년 동안의 집값 변동이 경제투표과정에서 적실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가정경제적 차원을 고려한 투표(pocketbook voting)에 유비될 수 있는 부동산가격 상승의 내용에 주목하면, 이것은 이질적 투표자들에게 이질적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의 경제적 의미는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유권자와 소유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수식으로 개인적 수준에서의 관계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정당이탈}_i &= \alpha + \beta_1 \text{집값상승율}_i + \beta_2 \text{자가소유}_i + \beta_3 \text{집값상승율}_i \times \text{자가소유}_i + \dots \\ \text{혹은: } u_i &= \alpha + \beta_1 x_i + \beta_2 z_i + \beta_3 x_i z_i + \varepsilon_i \end{aligned} \quad (3)$$

이 모델이 포착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 집값이 상승할 경우, 자가 소유 여부에 따라서 경제투표의 정도가 다를 수 있고, 또 달라야 한다는 점이다.  $\beta_3$ 에 의해 대표되고 있는 것은 자가 소유주들과 비소유주들의 경제투표에 있어서의 차이량이기 때문이다. 이후의 문제는 위 (3)식의 집합데이터적인 표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인데,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일단 위의 식을 그대로 집계데이터 수준의 식 (3)' 처럼 정의하고 검토해보기로 한다.<sup>16)</sup> 한 가지 주지할 사실은 이하의 모델에서 추산된 계수들의 변량들에 편의(bias)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계열적 비교는 여전히 유의미하다는 사실이고, 이러한 맥락에서 보다 더 나은 방법론적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차후의 연구로 남겨지는 과제라는 점이다.

- 16) 이것의 문제점은 위 식의 양변을 지리적 단위인  $j$ 에 대해 평균을 구하게 되면, 우항에서 집값 상승률과 자가 소유의 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집계데이터의 추정치에 bias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자면 다음과 같다. 위 식 (3)의 양변을 지리적 단위인  $j$ 를 기준으로 먼저 평균을 내면 다음의 식을 도출할 수 있다.

$$U_j = \alpha + \beta_1 X_j + \beta_2 Z_j + \beta_3 \frac{\sum_i x_i z_i}{n_j} + E_j \quad (3)''$$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오직  $x_i$ 와  $z_i$ 의 상관관계가 0인 경우에만 순수하게 집합데이터를 사용하는 본문의 식(3)'이 성립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text{Cov}(x_i, z_i) = \frac{\sum_i x_i z_i}{n_j} - X_j Z_j \text{이고, 이것이 0이 될 때 예야만, 식 (3)''에 있는 개인수준}$$

의 변수들을 소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U_j = \alpha + \beta_1 X_j + \beta_2 Z_j + \beta_3 X_j Z_j + E_j \quad (3)'$$

이상에서 도출된 식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begin{cases} Y_{jt} = \gamma_0 + \gamma Y_{jt}^* + U_{jt} \\ U_{jt} = \alpha + \beta_1 X_j + \beta_2 Z_j + \beta_3 X_j Z_j + E_j \end{cases} \quad (4)$$

## 2. 중범위 집합 데이터

집합 데이터라 함은 개인수준의 정보를 일정한 단위로 모아서(agggregation) 정리한 자료를 지칭한다. 사회과학연구, 특히 경제학에서 국가경제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에는 국가 수준의 총소득이라든지, 실업률 등의 정보를 말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 데이터들은 자연스럽게 시계열적인 관측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자면, 개인 수준의 단층적 서베이 자료의 다른 대척점에 있는 자료의 형태인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중범위” 집합 데이터는 이와는 구분이 되는 개념이다. 즉, 집합의 수준이 개인과 전체 체계의 중간에 위치한, 예를 들자면 선거구나 행정구역 등의 소단위 수준에서 수집된 정보를 단층적으로 배열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단층적으로 배열된 중범위 집합 데이터는 단위들의 지리적 경계가 변하지 않는 이상<sup>17)</sup> 그 이전의 정보들을 다시 시계열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시 말해, 단층적 시계열(CSTS: Cross-Sectional Time-Series) 자료인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동태분석의 난점들을 해결해 주는 동시에 정태적 분석의 관점을 잃지 않게 해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될 데이터의 양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이뤄져 있다. 첫 번째는 선거결과, 혹은 정당·후보자들에 대한 지지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거결과 데이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고 관리하는 역대선거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낮

17) 한국적 맥락에서의 어려움은 이러한 경계가 비교적 자주 바뀐다는 점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집합의 수준을 높이거나 낮춤으로써 시계열적인 연결을 할 수 있다.

은” 수준의 집계데이터는 전국 17,000여 곳 투표소에서의 정당득표수 등이다. 역대 선거를 시계열적으로 연결하고 또 선거구에서 집계된 것이 아닌 다른 여타 변수들과 접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sup>18)</sup> 한국의 3,000여 개의 읍·면·동 단위로 집계수준을 높여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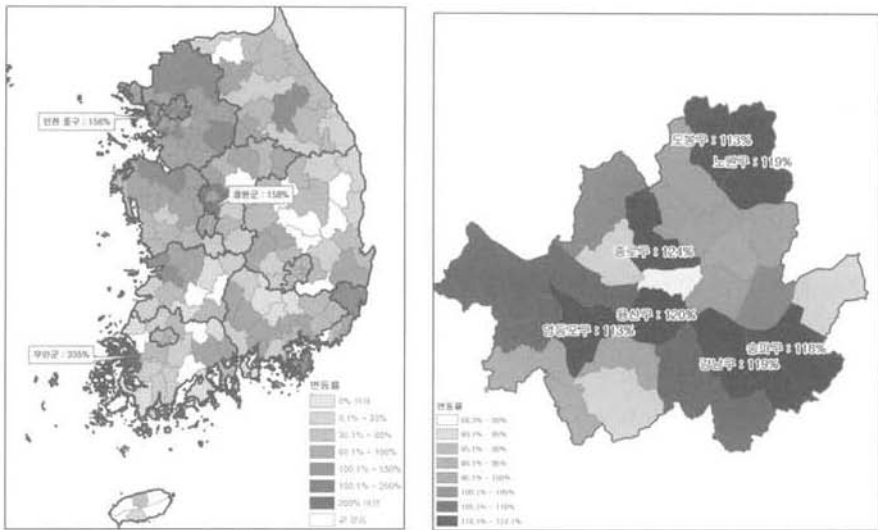
이러한 중범위 집계 데이터를 시간적으로 확장하여 역대선거들과 연결할 수 있는데, 본 연구를 위해서는 2000년대에 실시된 모든 전국적 선거들을 분석한다. 그 선거들을 열거하자면 두 번의 대통령 선거(16대, 17대)와 세 번의 국회의원 선거(16대, 17대, 18대), 그리고 두 번의 지방의회 선거들(3대, 4대)이 그것이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선거(정당득표)를 같이 포함시켰고, 또 지방의회선거들에서는 기초와 광역 단체장, 기초와 광역 의회 및 각급 비례대표선거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요 변수인 부동산 가격 변동은 전국의 읍면동들의 동기간 아파트 가격 변동을 포함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와서의 아파트 가격은 그 변동이 대단히 다이내믹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보인 각급 선거기간 직전 6개월 사이의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그림 2>는 2000년대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전국적으로 표현한 그림인데, 다른 무엇보다도 지리적 혹은 도·농간의 뚜렷한 패턴이 보이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주지할 사실은, 분석에 사용된 아파트 가격 변동은 읍면동 수준에서 측정된 것이지만, 지도에서 표현된 내용은 그림상에서의 식별을 위해 그 상위 수준의 집계데이터, 즉 구시군 수준의 가격측정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2000년대 들어와서 전국에서 아파트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전남 무안군으로서, 약 335%의 상승률, 즉 부동산가격이 네 배 이상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지역에서의 상승률은 작게는 70%대에서 많게는 125%까지 두 배 정도로 상승한 것도 알 수 있다.

마지막 변수는 자가(自家) 소유여부인데, 이 변수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0년과 2005년 인구총조사를 읍면동 수준에서 집계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아래의 그

18) 당연하게도, 중간범위 집합 데이터는 그 집계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fine-grained)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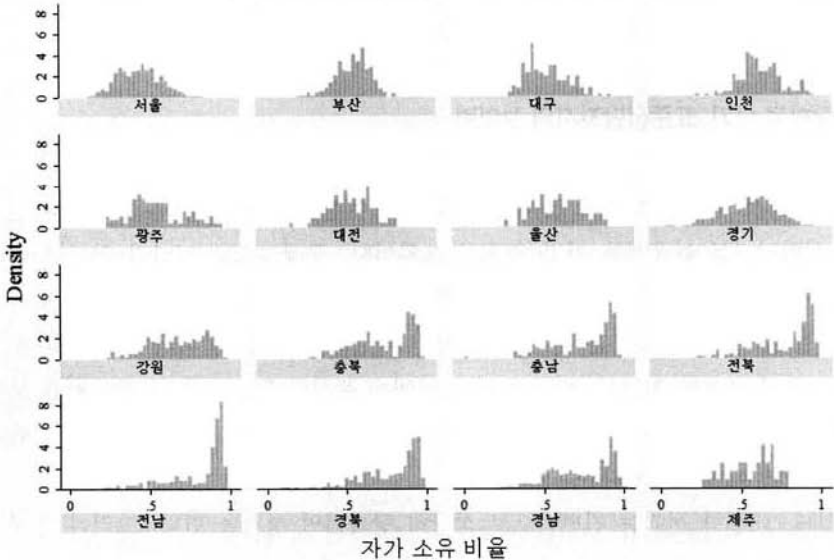
〈그림 2〉 2000년대의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림은 이 중 2005년 자료를 기준으로 광역단위 내에서의 자가 소유율의 분포를 드러내었는데, 대개는 다음과 같은 패턴을 드러낸다. 첫째, 대도시, 특히 특별·광역시에서의 자가 소유비율은 비교적 정규분포와 가까운 형태를 따르고 있는 반면, 비도시지역에서는 최빈값(mode)이 오른쪽으로 치우친—자가 소유율이 비교적 높은—형태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도·농간의 부동산소유 구조가 다르다는 것이다.<sup>19)</sup>

두 번째 흥미로운 관찰은, 이러한 양상이 지역적으로, 특히 영호남 간에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다. 전국에서 가장 자가 소유율이 낮은 곳은 당연히 경기도 서울(44.1%)이며, 부산(54.7%), 대구(53.9%), 광주(55.0%) 지역에서는 비슷한 평균소유율을 보였다. 비도시지역들의 평균소유율은 지역적인 특이점들이 약간 있는데, 전남(81.1%)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자가소유율을 보였고, 전북(77.6%), 경북(76.7%), 경남(73.6%)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의 자가소유율을 드러냈다. 그러나 평균의 수준을 떠나서, 도시지역에서는 비교적 정규분포를 따르고, 비도시지역

19) 앞 절에서 전개한 모델을 반추해 볼 때, 이 사실은 도·농 변수가 표준지지를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림 3〉 전국의 자가 소유 비율(2005년 센서스 기준)

에서는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모델을 전개하고, 그 모델을 경험적으로 분석할 데이터와 변수들을 살펴보았다. 부동산 가격 변동이 소유구조와 맞물리면서 선거에서 어떠한 단기적 변동을 가져오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곳에서 단기적 변동은 해당 선거에서의 정당지지가 얼마나 표준정당지지에서 이탈하는가로 정의되었다는 것 등이 모델의 주요 내용이었다. 본 모델에서 사용된 자료는 읍면동 수준에서 집계된 2000년대의 선거결과, 부동산가격 변동, 그리고 자가 소유 여부 등을 측정된 변수들이며, 위에서 이에 대한 개략적인 기술을 살펴본 바, 다음 절에서는 경험적인 분석의 결과를 보인다.

#### IV. 결과

이 절에서는 이상 논의된 결과들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보고 한다. 본 연구에 사

용된 다량의 데이터 소스와 긴 시계열을 고려할 때 모든 결과들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결론적인 항목에 따른 결과들을 정리하여 보고하기로 한다.

## 1. 당파적 선거: 표준정당지지 설명력

서두에서 주지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 여전히 지역주의, 혹은 기존의 선거가 선거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한국 선거에서 표준지지율의 개념은 모든 선거에서의 정당득표율의 분산을 50% 이상 설명할 수 있다. <표 1>은 앞 절에서 보인 식 (2)의 회귀분석에서 나타난  $R^2$ 들<sup>20)</sup>을 모아서 보고한 것인데, 이들은 단순 양변수 분석인데도 대단히 높은  $R^2$ 를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선거의 각급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비교적 뚜렷한 패턴이 보인다는 사실이다.

첫째, 대통령 선거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당파적인 성격을 띤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높은 수준의 당파적 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가장 가시적인(salient) 선거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가장 당파적인, 또 가장 "표준적"인 선거는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표준적이지 않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는 유권자들이 반드시 대통령 후보자들과 소속 정당을 등치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 선거에서의 높은 투표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타 선거의 투표자 집단과 유의미하게 다른 유권자들의 유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와 검토는 차후의 과제로 미룬다.<sup>21)</sup>

둘째, 비례대표 선거들은 예외 없이 항상 개인후보자에 대한 선거보다는 더 당파적이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한데, 유권자들이 후보자들 개인에 대한 생각을 할 때보다 정당명부에 대한 투표를 할 때 이미 확립된 정당 충성심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2000년대에 가장 당파적인 선거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들이었다.

20) 이 항목들은 두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들이기도 하다.

21) 투표율과 정당지지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한국 선거 연구에서 아직 자세하게 검토되지 않은 영역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미국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으면 특정정당—민주당—에 유리한지를 경험적으로 검토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마르티네즈 외(Martinez and Gill 2005) 참조.

〈표 1〉 한나라당에 대한 표준정당지지와 선거결과와의 상관관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2002 (제16대)	.72	2002(광역장)	.66
2007 (제17대)	.75	2002(광역의회)	.62
국회의원선거		2002(광역비례)	.72
		2002(기초단체장)	.63
2004(지역구)	.67	2006(광역장)	.73
2004(비례대표)	.82	2006(광역의회)	.75
2008(지역구)	.58	2006(광역비례)	.78
2008(비례대표)	.84	2006(기초단체장)	.63

셋째, 지방선거, 특히 보다 단위가 작은 기초 단체 수준의 선거들이 반드시 전국적 선거들에 비해 덜 당파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유권자들이 삶에 보다 더 가까운 직책의 후보자들을 선출하는 과정을 고려할 때, 이들을 전국적인 정당과 덜 연관을 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석 결과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합리적으로 이해 가능한데, 후보자 인지도가 떨어질수록 공천정당의 이름(label)이 주는 신호(cue)를 유권자들이 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는 지방선거에서 기초 수준으로 내려갈수록, 인지도와 관심이 떨어지는 선거일수록, 후보자들이 소속정당을 강조하는 양태를 띠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마지막으로, 뚜렷하지는 않지만, 가장 최근의 국회의원 선거를 볼 때,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유권자들의 분할투표(split-ticket voting)를 촉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적 설명을 생각해 보게 한다. 유권자들에게 후보자가 아닌 정당에 대한 “순수한(sincere)” 지지를 표현할 기회를 줌으로써, 오히려 지역구 선거는 장기적 정당 충성심의 영향을 덜 받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전략적 투표와 이러한 가설은 이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과연 유권자들의 비례대표 정당명부투표에서 정당충성도가 앞으로도 얼마나 지속적(consistent)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학계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주요 관심사여야 할 것이다. 2000년대 이전 국회의원 선거들에 대한 비교 연구 또한 이런 맥락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들은 직관적인 사실들을 데이터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선거 간 비교연구가 통해 얼마나 흥미로운 토픽들을 생

산할 수 있으며, 한국의 유권자들에 대한 깊은 이해에 다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맥락에서는, 앞에서 제안한 표준정당지지의 개념이 한국선거 연구에 그만큼 적실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겠다.

## 2. 경제투표의 흔적

아래의 <표 2>는 앞 절에서 구성된 부동산 가격변동과 소유구조가 선거에 미치는 단기적 효과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적실한 질문은 과연 경제투표라는 것이 여당에 대한 보상/처벌의 기제를 따르느냐 하는 점이다. 따라서, 각 해당 선거 시의 여당—2008년 이전에는 민주당, 2008년 이후에는 한나라당—의 단기적 득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표로 나타내었다. 항목의 값들은 부동산 가격이 100% 상승(즉 두 배로 상승)한다면, 자가 소유 유권자들과 미소유 유권자들의 여당 지지가 얼마만큼 변화할 것인지를 추정한 것이다.

앞서 논의한 모델에 의하면, 부동산을 소유한 유권자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보상”을 정부여당에 해줄 것으로, 반면 미소유 유권자들은 그것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것과 일관된 예측은 자가 소유자들은 항상 미소유자들보다 계수 값이 커야 한다는 사실이다.

<표 2>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 선거(2002년 대선)의 예를 제외하고는 본 연구가 분석한 모든 선거에서 자가 소유자들이 미소유자들보다 항상 단기적으로 여당을 더 (표준정당지지도보다 높게) 보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sup>22)</sup> 예를 들어, 가장 최근의 2008년 국회의원선거의 예를 들어보자. 만약 집값이 두 배로 상승한다면,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는 부동산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17%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그런 반면 미소유자들 사이에서는 3.2%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한 가지 흥미로운 관찰은, 이러한 단기적 경제투표의 변동이 처벌보다는 보상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비록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음의 방향

22) 모든 항목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나, 비교적 일관된 차이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2〉 부동산 가격 상승률(100%)이 여당 득표에 미친 영향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자가소유	미소유		자가소유	미소유
2002(제16대)(민)	.017**	.025*	2002(광역장)(민)	.112*	.059
2007(제17대)(민)	.121	-.032**	2002(광역의회)(민)	.066*	.036*
국회의원선거			2002(광역비례)(민)	.079	.052**
			2002(기초단체장)(민)	.139*	-.217
	자가소유	미소유		자가소유	미소유
2004(지역구)(민)	.104*	-.026*	2006(광역장)(민)	-.000*	-.119*
2004(비례대표)(민)	.121	-.070	2006(광역의회)(민)	.003	-.104
2008(지역구)(한)	.082*	.006**	2006(광역비례)(민)	.021*	.020
2008(비례대표)(한)	.169**	.032**	2006(기초단체장)(민)	-.044	-.132

별표는 유의수준을 나타냄.  $p < .01$ (\*\*) 및  $p < .05$ (\*).

(-)으로 항상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미미하게나마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가설적인 설명은 지극히 한국정치 상황과 긴밀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개발상황(혹은 지속되는 개발의 가능성)을 정당지지로 연결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찰은 여당이 항상, 지역의 소유구조와는 관계없이 선거에서 개발공약들을 내어놓는 선거전략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미묘한 “지역이기주의”—국가 사회적 경제투표(sociotropic voting)와 개인적 경제투표(pocketbook voting)의 미묘한 착종—는 한국적 정치환경에서만 고유하게 찾아볼 수 있는 대단히 흥미로운 현상으로서, 이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규명은 차후 연구의 몫이다.

전반적인 경제투표의 흔적들은 전국적인 선거, 즉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서 보다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반면, 지방선거에서는 일관되고 유의미한 패턴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 유권자들이 경제적 고려를 투표로 연결시킬 때에는 지역적 고려에서가 아니라 전국적 지도자에 대한 처벌 혹은 보상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을 나타내는 듯하다. 달리 말하면, 한국의 유권자들은 전국적 단위의 선거, 즉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난 기간에 대한(retrospective) 고려를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 단체장, 의원, 그리고 정당명부에 표를 던질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여당”이라는 개념이 지방선거에서는 흐려진다는 사실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시장이나 도지사, 그리고 지방의회의원들이 비록 전국적 정당의 공천을 받았지만, 부동산 가격변동이라는 경제적 변화는 근본적으로 전국적 정당, 전국적 지도자에게 책임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더 나아가 지방선거에서는 한국의 유권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prospective)가 보다 주된 관심사인 것은 아닐지 가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난 6개월간의 부동산 가격변동이 지방선거에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내용들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또한 차후 연구의 몫이 아닐까 한다.

끝으로, 결과에서 직접적으로 뚜렷하게 보이는 점은 아니지만, 정당에 대한 투표, 즉 비례대표—그것이 국회의원선거든 지방의회선거든—선거에 반드시 후보자에 대한 투표보다 경제투표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관찰이다. <표 1>에서 정당표준지지도와 관련한 결과의 맥락에서 우리는 비례대표제 선거가 유권자들의 정당에 대한 투표와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표 2>에서 보듯이 비례대표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전국적인 정당을 사고한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정부여당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보상/처벌의 차원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경제투표라는 유권자의 투표행태가 정당이라는 추상적 기관에 대한 처벌/보상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정치적 지도자의 경제적 성과와 연결이 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고 볼 수 있다. 유권자들이 기표소에 들어가서 정당의 선택을 할 때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당에 대한, 비교적 긴 시간동안 일관되고 변화하지 않는 충성심에 보다 기준해서 투표를 하는 반면, 선택가능한 후보자들을 볼 때에는 보다 단기적인 고려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설명을 생각해볼 수 있다.

## V. 토론

이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한국선거의 구체적인 양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극히 방법론적인 것이다. 즉 한국선거연구에서 지역주의 “이후”를 사고하려고 한다면 어떤 문제들이 있고, 또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으며, 그 극복의 구체

적인 한 가능성으로서 2000년대 한국선거에 미친 부동산가격 변동을 일례로 보여주었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함의를 토론하는 것으로써 결론을 대신하려고 한다.

첫째, 한국선거 연구에 있어서 서베이 자료와 함께 중범위 집합자료를 사용하여 양자의 장단점을 서로 잘 보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범위 집합자료를 통하여 흥미로운 선거 간 비교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현존하는 서베이 자료로서는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물론, 서베이 연구를 집합자료 연구로 대체하라는 주장을 펴는 것이 아니라 양자 간의 보완 및 시너지 효과를 지적하는 것으로서, 서베이 추정치들의 선거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해주는 집합자료를 이용한 보정이나, 서베이에 집합자료에서 얻은 정보를 맥락적 변수(contextural variable)로 추가하는 테크닉들은 이후의 연구에서 고려해볼만한 사항들이다.

둘째, 지역주의의 통제라는 것은 시간적인 과거의 정당지지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효율적이다. 본 연구에서 보인 “표준정당지지” 개념이 바로 이러한 과거선거(electoral history)를 일반화한 것으로서, 한국선거연구에서의 적실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서베이 연구에서의 함의는, 패널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이나 지난 선거에 대한 응답자의 회고변수, 혹은 지지정당변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본문에서도 보였드시피, 단층적인 지역주의의 통제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종국적으로는 소표본(small-N)의 문제로 귀결되고 만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도출한 “표준정당지지”라는 변수에 대한 부가적인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의 맥락에서는, 이 표준정당지지 변수는 단순히 통제를 위한 기능을 하는, 이 변수를 제외한 “이후의” 변량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바, 주요변수가 아니었다. 그러나 <표 1>에서도 보였드시피, 이 변수는 한국의 정당들이 지난 선거에서 유권자들로부터 얻은 일반적 지지의 대표값(summary)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적극적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한국 정당체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세 번째, 선거 간 및 비례대표제에 대한 연구가 보다 더 절실하다. 앞 절에서 본 것처럼, 한국선거의 경제투표라는 경험적으로 비교적 간단한 모델을 연구함에 있어서, 선거 수준 간(대통령, 국회의원, 지방), 그리고 지역구-비례대표 간에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났다. 이것은 가설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주요 변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권력의 위치와 책임기관을 파악하면서 확연하게 다른 패턴으로 투표를 한다는 가설이 그 하나이고, 또 선거들 간에 유의미하게 다른 유권자 집단이 투표에 참여한다는 가설이 다른 하나이다. 이러한 가설과 이 가설들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 투표행태의 문제들은 선거 간 연구분석이 보다 더 활성화되고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네 번째, 본 연구는 경제적 요인을 부동산 가격과 등치시킨, 그리고 부동산 소유 여부를 매개변수로 사용한, 매우 단순한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화 정도나 다른 인구학적 변수들을 모델에 접목시켜 반영하는 방안, 더 나아가 선거에서의 개발공약—예를 들어 지난 선거의 “뉴타운 플랜” 같은—과 관련된 내용들을 연구에 접목시키는 방안들은 이후의 연구에서 주요하게 고려할 만한 사안들이다. 투표행태에 대한 구미(歐美)연구들의 논의를 보다 더 비판적으로 음미하고 한국적 상황에 대한 긴밀한 고려를 통해, 이론적으로 더욱 유의미한 변수들을 포함시키는 작업은 한국에서의 경제투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보다 풍부하게 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세련된 한국적 투표모형의 개발과, 이를 한국 선거자료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가이드해 줄 엄정한 연구방법론의 전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구미(歐美)연구들의 한국선거로의 단순한 이식이 아닌 창조적 적용을 위해 기존 한국 선거 연구자들이 발견하고 발표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한국적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주어진 데이터가 연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 데이터의 수집·구성과 재조적을 인도하는 과정의 확립을 위해, 한국선거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과 그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 이론의 수립이 절실하다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하나의 시론(試論)에 불과하다.

투고일 2009년 8월 29일

심사일 2009년 9월 7일

게재확정일 2009년 10월 5일



## 참고문헌

- 강원택. 1998. "유권자 이념적 성향과 투표 행태 — 15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 특별학술회의: 제15대 대통령선거 분석과 정치개혁.
- \_\_\_\_\_. 1999. "유권자의 선택과 TV 선거운동의 효과 —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8집, 155-74.
- \_\_\_\_\_. 2003. 『한국의 선거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서울: 푸른길.
- \_\_\_\_\_. 2004. "제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지지에 대한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13집 2호, 143-65.
- \_\_\_\_\_. 2006. "2002년 지방선거의 정치적 의미: 중간평가 혹은 대선 전초전?" 『한국정치연구』 제15집 2호, 61-83.
- 권인석. 1999. "선거정치와 정당체제: 정당과 관련된 유권자 형태의 분석을 위한 이론적 검토." 의회 정당 선거연구위원회 1999년도 춘계학술회의: 한국정치50년의 성찰.
- 김수진. 2001. 『민주주의와 계급정치』. 서울: 백산서당.
- 김재한. 1993. "제14대 대선과 한국경제." 『한국정치학회보』 제27집 1호, 99-120.
- 박경산. 1993. "제14대 대통령선거에 나타난 경제적 투표." 『한국정치학회보』 제27집 1호, 186-208.
- 박찬욱. 2004. "제17대 총선에서 2표병립제와 유권자의 분할투표: 선거제도의 미시적 효과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13집 2호, 39-85.
- \_\_\_\_\_. 2005. "한국인 정치참여의 특징과 결정요인: 2004년 조사결과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14집 1호, 147-93.
- 박찬욱·김경미·이승민. 2008.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 이념정향이 후보선택에 미친 영향."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분석한다』. 박찬욱 편. 서울: 생각의 나무.
- 박찬욱·홍지연. 2009.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국유권자들의 분할투표 행태에 관한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18집 1호, 1-28.
- 신기현. 1999. "선거와 지역주의: 지역불균형발전과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한국정치 50년의 성찰.
- 안청시·이승민. 2006. "5·31 지방선거와 한국의 지방정치: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결과분석." 『한국정치연구』 제15집 2호, 85-120.

- 이갑윤·이현우. 2000.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 14~16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2호, 149-70.
- 이남영. 1998. "유권자의 지역주의 성향과 투표." 『한국의 선거 II: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이남영 편. 서울: 푸른길.
- 이준한·임경훈. 2005. "과연 '중대선거' 인가?"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분석』. 박찬욱 편. 서울: 푸른길.
- 이현우. 1998. "한국에서의 경제투표." 『한국의 선거 II: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이남영 편. 서울: 푸른길.
- \_\_\_\_\_. 1999. "선거사안과 후보지지도 변화: 15대 대선의 경우." 1999년도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21세기 한국정치학의 도전과 선택.
- 정병기. 2003. "16대 대선과 계급/계층 균열: 양대 정당 후보 지지표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지지표 분석을 중심으로." 『제16대 대선의 선거과정과 의의』. 김세균 편.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영태. 1993. "계급별 투표행태를 통해 본 14대 대선." 『한국의 선거 I』. 이남영 편. 서울: 나남.
- 정진민. 1992. "한국선거에서의 세대요인." 『한국정치학회보』 제26집 1호, 1145-68.
- 정진민·황아란. 1999.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정치: 세대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2호, 115-35.
- 정한울·권혁용. 2009. "경제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의 경제투표."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 3』. 김민전·이내영 편. 서울: EAI.
- 조기숙. 2000. 『지역주의 선거와 합리적 유권자』. 서울: 나남출판.
- \_\_\_\_\_. 2000. "한국의 지역주의 선거와 민주화." 한국정치학회 2000년도 연례학술회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9. 역대선거정보시스템. <http://www.nec.go.kr/sinfo/index.html>.
- Achen, Christopher, and Phillips Shively. 1995. *Cross-Level Inferenc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chen, Christopher H. 1992. "Social Psychology, Demographic Variables, and Linear Regression: Breaking the Iron Triangle in Voting Research." *Political Behavior* 14. No. 3, 195-211.
- Bollen, Kenneth A. 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New York: Wiley-Interscience.
- Brady, Henry E., and Richard Johnson. 2006. "The Rolling Cross-Section and Causal Attribution." In *Capturing Campaign Effects*, eds. H. E. Brady and R. Johnson. Ann Arbor, MI: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Converse, Philip E. 1966. "The Concept of a Normal Vote." In *Elections and Political Order*, eds. Angus Campbell, Philip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E. Stokes. New York: Wiley.
- Jolliffe, I. T. 2002.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New York: Springer.
- Key, V. O., Jr. 1955. "A Theory of Critical Elections." *The Journal of Politics* 17. No. 1, 3-18.
- Kiewiet, D. Roderick. 1981. "Policy-Oriented Voting in Response to Economic Issu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5. No. 2, 448-59.
- Kiewiet, D. Roderick, and Douglas Rivers. 1984. "A Retrospective on Retrospective Voting." *Political Behavior* 6. No. 4, 369-93.
- Kinder, Donald R., S. Adams Gordon, and Paul W. Gronke. 1989. "Economics and Politics in the 1984 American Presidential Elec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3. No. 2, 491-515.
- Kinder, Donald R., and D. Roderick Kiewiet. 1979. "Economic Discontent and Political Behavior: The Role of Personal Grievances and Collective Economic Judgments in Congressional Vot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3. No. 3, 495-527.
- King, Gary. 1997. *A Solution to the Ecological Inference Problem: Reconstructing Individual Behavior from Aggregate Data*.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ramer, Gerald H. 1983. "The Ecological Fallacy Revisited: Aggregate- Versus Individual-Level Findings on Economics and Elections, and Sociotropic Voting."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7. No. 1, 92-111.
- Markus, Gregory B. 1988. "The Impact of Personal and National Economic Conditions on the Presidential Vote: A Pooled Cross-Sectional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2. No. 1, 137-54.
- \_\_\_\_\_. 1992. "The Impact of Personal and National Economic Conditions on Presidential Voting, 1956-1988."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6. No. 3, 829-34.
- Markus, Gregory B., and Philip E. Converse. 1979. "A Dynamic Simultaneous Equation Model of Electoral Choice."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3. No. 4, 1055-70.
- Martinez, Michael D. and Jeff Gill. 2005. "The Effects of Turnout on Partisan Outcomes in U.S. Presidential Elections 1960~2000." *The Journal of Politics* 67. No. 4, 1248-74.
- Park, Won-ho. 2008. *Ecological Inference and Aggregate Analysis of Election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 Thomsen, Søren. 1987. *Danish Elections 1920~79: A Logit Approach to Ecological Analysis and Inference*. Aarhus, Denmark: Politica.

